

행 정 학

해설위원 : 김덕관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①	④	④	③	②	④	④	②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②	①	③	①	③	③	④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5	재무이론	3
정책이론	3	행정환류	—
조직이론	2	전자정부론	—
인사이론	5	지방자치론	2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7	생소한 문제	3	100점 방지	0
------	----	--------	---	---------	---

↓
실질적인 만점: 100점
고득점: 90점 이상
분발대상: 75점 이하

매번 출제되던 지방직 9급 난이도와 패턴대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합격할 준비가 된 수험생은 90점 이상은 가볍게 득점할 수 있었던 문제구성입니다. 그동안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오고 기출문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15문제 정도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이고, 기존 기출문제에서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가 2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점수는 85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소한 문제도 풀 수 없게 100점 방지용으로 출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문제 이상 맞추었다면 고득점이 완성됩니다.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서 원체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기출해설 강의에서 많이 홍보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시원찮다면 이번 기회에 공부의 우선순위와 복습의 중요성을 꼭 느끼셔야 합니다. 행정학 고득점은 매번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혼동됨 없이 정확하게 풀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강의, 기출문제, 모의고사 등에서 다 다루는 문제인데 그동안 복습을 통한 반복이 잘 되어 있어야 현실에서 구현되었을 겁니다.

이 작업이 잘 된 이후에 생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모의고사와 기본서를 활용하여 터치해야 합니다. 이번 시험의 생소한 문제 중 이론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내용은 대비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였으나, 행정학을 떠나 사회적으로 가장 유명한 내용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는 오히려 고마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력과 부족한 개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메꿔서 다음 시험 점수 폭발의 기초로 삼기 바랍니다.

▶ 문제 및 해설

문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암기용 해설>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 탈규제: 신공공관리론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 민주성: 뉴거버넌스론
-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 ▶ 대응성: 신공공관리론(효율성은 출제의도에 따라 다름)

<이해용 해설>

- ① (○) 19C 미국 고전적 행정학의 기초가 되었던 정치행정이론,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전통적 관료제론 등은 절약과 능률성을 추구하였다.
- ② (X) 신행정론은 1960년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과 실천, 사회적 형평성 등을 추구하였다. 탈규제는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와 관련된 가치이다.
- ③ (X), ④ (X)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의 원리를 통한 효율성과 고객대응성을 강조하였다. 뉴거버넌스론은 정부독점적인 전통적 관료제 방식보다 다양한 참여자가 협력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이론으로, 신공공관리론보다 시민 참여를 중시하며 민주성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문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이론 -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암기용 해설>

-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 ▶ 대리인 문제 해결: 제량권 축소

<이해용 해설>

- ① (○) 구조적 상황이론은 환경에 대한 결정론으로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 ② (○) 전략적 선택이론은 환경에 대한 임의론으로 상황이 조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 ③ (○)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 대한 임의론으로 조직은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④ (X)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인의 제량권 축소를 주장한다.

문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 ④ 효율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 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암기용 해설>

-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 합리적 개인 가정의 비현실성

<이해용 해설>

- ② (○) 공공선택이론은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고객대응성 혹은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행정이 민주행정이라고 본다.
④ (X) 공공선택론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암기용 해설>

- ③ 영기준예산제도: 총체주의, 분권적·참여적 예산

<이해용 해설>

- ③ 전통적 예산제도 중에 총체주의적 방식을 취하면서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분권화된 방식을 취하는 예산제도는 영기준 예산제도 밖에 없다. 총체주의적인 예산제도는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암기용 해설>

-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 하향식(Top-down) 방식(중앙예산기관이 각 중앙부처의 지출한도를 결정)

<이해용 해설>

- ① (○), ③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정해진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주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② (X)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에서는 지출한도를 각 중앙관서(부처)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이 각 중앙관서(부처)에 하향식으로 배분한다.
④ (○) 우리나라의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 운영은 제도의 취지대로 부처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

문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암기용 해설>

-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경제적 기능: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 기능

<이해용 해설>

- ① (○) 예산의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은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 중 자원배분 기능이 다.
② (○) 세입 면에서는 차별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 중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③ (○) 예산사용으로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 중 경제안정 및 성장 기능이 다.
④ (X)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경제적 기능은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 및 성장 기능만을 말한다.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하는 기능은 쉬크(Schick)의 행정관리적 기능 중 통제 기능이다.

문 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제처 - 국무총리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암기용 해설>

-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이해용 해설>

- ④ (X)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이다.

문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 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암기용 해설>

- ② 이익집단 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 대중 정치

<이해용 해설>

- ② (X)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특별히 관심이 있는 집단이 없는 대중 정치의 예시이다.

문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규제영향분석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 ㉡. 지방공기업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 ㉢.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 ① \neg , \vdash
② \neg , \vdash
③ \vdash , \vdash
④ \vdash , \vdash

<암기용 해설>

- 나. 지방공기업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 ▶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예외: 지방자치단체장
- 리.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 ▶ 1993년

<이해용 해설>

- ㄴ (X) 지방공기업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 ㄷ (X)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 처음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문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암기용 해설>

- ② 커서작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미시적 집행구조
-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채택
-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실제 집행

<이해용 해설>

- ① (○)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상황론적 집행)은 집행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거시적 집행구조와 미시적 집행구조로 나누고, 미시적 집행 국면에서 나타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모형이다.
- ② (×) 미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③ (×)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채택’이다.
- ④ (×)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실제 집행’이다.

문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암기용 해설>

- ③ ~~조정교부금~~

▶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해용 해설>

- ③ (X)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는 다른 제도로, 광역자치단체가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이다.

문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암기용 해설>

-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 강임: 징계 아님

<이해용 해설>

- ④ (X) 강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다.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문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
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암기용 해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주민감사청구 요건: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이해용 해설>

- ④ (X)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3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④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스(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암기용 해설>

-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처리의 연속성 유지 가능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 반영이 불리
 ④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스(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 엘리스(Allison) 모형의 Model II (조직과정모형):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가정

<이해용 해설>

- ① (X) 공식적으로 정해진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O)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운영절차를 따르면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③ (X) 표준운영절차에만 따르면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하고 예외적인 문제를 반영하기에는 불리해진다.
 ④ (X) 정책결정모형 중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모형은 엘리스 모형의 Model II (조직과정모형)이다.

문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암기용 해설>

-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고위직 관료: 예산극대화보다는 관청형성을 통한 사익 추구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중하위직 관료: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득
 고위직 관료: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 관청형성모형: 관료도 공적이익보다 사적이익을 우선시

<이해용 해설>

- ① (O)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합리적인 관료들은 자신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회피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청형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본다.
 ② (X) 합리적인 관료들이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는 모형은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이다.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은 이를 비판하는 모형으로,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극대화보다는 관청을 형성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주장한다.
 ③ (X) 관청형성모형은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고, 고위직 관료는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고 본다. 물론 둘 다 예산극대화보다는 관청형성을 추구한다.
 ④ (X) 관청형성모형은 공공선택론의 가정을 적용하는 모형으로 관료 또한 공적이익보다 사적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본다.

문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암기용 해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피규제자의 자율성: 네거티브 규제 > 포지티브 규제

<이해용 해설>

- ② (O) 경제규제는 시장경쟁과 관련된 규제로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에 비해 사회규제는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③ (X)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규제방식이며,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따라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은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높다.
 ④ (O) 직접규제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규제하는 방식이라면,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정부가 규제권한을 민간집단에 위임하고 그 민간집단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공동규제 방식도 있다.

문 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암기용 해설>

-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 별정직 공무원

<이해용 해설>

- ① (X)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② (O), ③ (O), ④ (O)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 문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5만원	10만원

<암기용 해설>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 음식물: 3만원 유지		

<이해용 해설>

- ③ (X)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중 음식물 부분은 종전의 3만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문 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암기용 해설>

-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 역량: 우수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
 ㄷ.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예외 있음

<이해용 해설>

- ㄱ (X)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가 아니라 우수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말한다.
 ㄴ (O) 역량평가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ㄷ (O)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X)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둘 다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 문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연근무제도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③ 심각한 보안위협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암기용 해설>

-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 재택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은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의 지급가능)

<이해용 해설>

- ④ (X) 재택근무자의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고, 정액분만 지급 가능하다.